

02

국토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100%	S
90% 이상 ~ 100% 미만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50% 이상 ~ 60% 미만	E
50% 미만	F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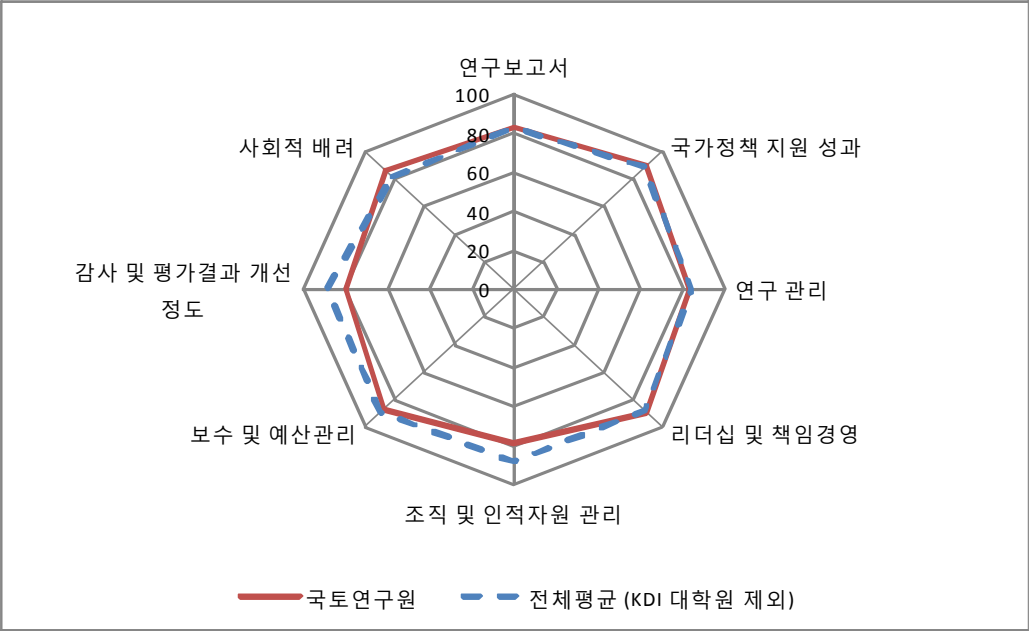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급
1-1. 연구 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 등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 여부	E
1-2. 국가정책 지원 성과	1-2-1. 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지원 성과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실적과 성과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B B B
	1-2-2.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성과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정책 수립 기여도	A
	1-2-3. 정책 집행사업 지원 성과	<input type="checkbox"/>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B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통 우수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 수행·관리의 적정성	B B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실적의 우수성	B
	1-3-3.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input type="checkbox"/> 정부 3.0 추진 성과 정도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A B B
	1-3-4.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	<input type="checkbox"/>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와 성과	B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급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B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B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B
	2-1-2. 책임경영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input type="checkbox"/> 책임경영 이행 정도	S
	2-1-3. 자율지표	<input type="checkbox"/> 기관고유사업 수행과제	B
<input type="checkbox"/>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		A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C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C
		<input type="checkbox"/>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B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C
	2-2-2. 노사관계 선진화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C
	2-2-3.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B
		<input type="checkbox"/>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B
		<input type="checkbox"/>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목표달성 정도	C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전략적 연구사업비 운용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A
2-3-2. 보수체계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S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E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input type="checkbox"/>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C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C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S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B
		<input type="checkbox"/> 휴가장려, 출산휴가,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S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B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분야]

-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한 점은 돋보이나, 사례조사로부터 보편적 연구결과의 도출 및 적절한 사례의 선정이 미흡함.
- 국정과제 지원 및 관련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 인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수탁과제의 합리적 선별·수행 기준이 필요함. 부동산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학 이슈에 대한 민감성과 정책연구네트워크의 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지원과 정책 집행사업이 매우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과제의 시의성이나 주제 선정의 정책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연구결과의 정책실적이 높고, 그 정책의 파급효과가 우수함.
- 기본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상하반기 공모절차를 차별화하여, 정책고객의 연구수요에 대응하고, 연구과제 발굴의 효율성을 제고함. 정책연구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시연구과제 수행관리가 체계적임. 다만 공모과정은 내부직원만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엄격한 심의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적은 협동연구 과제를 선정에서 배제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심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들의 학술연구결과가 양호하며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이 잘 구축되어 있으나, 일반인들의 관심을 충족할 연구결과의 확산노력이 부족함.
-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하여 17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국제화사업 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국제세미나 개최 참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 졌으나, 단순협력보다는 기관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적인 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경영분야]

- 국토연구원의 연구·경영환경의 악화로 발생한 노사문제를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개선을 보였으며, 기관의 연구역량을 단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 점은 우수하나, 기관의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토연구원의 비전과 목적을 달성에 적절한 발전과제를 전향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므로 노사문제를 포함한 현안과제나 중점과제를 창의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하는 의사결정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관장의 경영목표들은 무난하게 수립되었으나 그 보다는 경영목표 실천과제의 내용이 더 적절하며, 특히 경영목표 실천과제들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음.
- 국토연구원의 5대 경영목표 중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및 “통일시대에 대비” 등이 다소 미흡하며, 기관의 특색이 잘 나타나지 않음.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를 위하여 선진국 또는 OECD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그와 더불어 개도국 대상의 ODA사업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효과를 높였으나, 정책지원내용 홍보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의 실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직의 의사결정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한 점은 긍정적이나,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운영 실적과 효과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것은 개선이 필요함.
- 대항노조의 설립(복수노조체제), 노사협의회 미구성 등 노사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노무교육이나 의사소통체계도 작동하지 않음. 노사상생의 사고에 기초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경조사비 지급 기준과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포상기준을 축소하는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방만경영 체크리스트를 개선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고, 미이행 이행계획을 실천하여야 함.

- 중점연구과제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과제를 매년 발굴하기로 하고 있으며, 1차발굴된 과제를 정책실무협의회에서 평가하고, 이를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양방향의 주제협의 체제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있음.
- 연봉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연봉체계 중 기본연봉을 비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부동산 및 건설시장 장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시모니터링체제를 운영·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총 5개의 연구과제 수행하는 등 국정과제 수행 개선실적이 우수함.
- 인사사고 및 업적평가시스템, 연봉체계와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과 관련한 개선이 완료되지 아니함.
- 장애인 고용노력을 충실하게 전개함으로써, 고용률이 정부기준을 충족하였음.
- 국가 유공자 우선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채용실적 확대 노력에 힘입어 고용률이 정부 기준을 충족하였음. 다만,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에 관한 내부규정화가 서둘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통합행정시스템에 의한 근태관리, 멘토지정 등 인턴운용 내용이 우수하며, 교육지원, 취업지원, 내부 전환채용 등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였음.
-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적극 기울여 소진율이 대폭 증가되도록 해야 함.
-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에 관한 내부규정화, 휴가사용 정도 등은 충분히 잘 이루어졌음.
- 복리후생에서는 차별없는 동일한 처우를 시행하고 있으나 급여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존재함. 비정규인력이 50%를 차지함에도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운용과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 등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장 점>

- 현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연구로서 기존 연구를 발전시키고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음.
- 활용가능한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일부 보고서에서는 GIS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 연구의 기본 틀을 제공함.
-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

<단 점>

- 연구방법론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례조사로부터 보편적 연구결과의 도출 및 적절한 사례선정이 미흡함.
- 정책방안에서 재원확충, 법제도, 추진체계 등 실천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정책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제언 및 제도개선 내용이 다소 단순하여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분석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추가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며 각각의 정책방안들의 장단점이 함께 논의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구체성을 확보한다면 정책활용 가능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1-2 국가정책 지원 성과

1-2-1. 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지원 성과

□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사업의 공정한 선정, 관리, 평가를 비롯한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지원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서민임대차선진화, 기업형민간임대, 지역행복생활권 실현, 낙후지역 개선 방안 등 다양한 과제수행으로 국정과제를 지원함.
- 기존 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발전전략과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지원, 임차 시장 맞춤형 제도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함.
- 연구과제에 대해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등 성과 확산 작업을 활발히 진행함.
-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등 우수 연구 사례가 주요 국정과제 및 연구원의 설립 목표에 잘 부합하며,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과 법제화를 도출하는 등 성과가 우수함.

<단 점>

- 일부 연구는 간담회 개최, 단기 및 중기과제 제시 등과 같이 실질적 성과가 미흡함.
- 주거안정대책, 부동산시장 안정화 연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등은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이 미흡하여 투입·산출간의 불균형이 있음.
- 원조 성격이 강한 'ODA(공적개발원조) 지속 확대 및 모범적,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사업 등 일부 수탁과제(사업)는 예산,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도하였다고 판단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수탁과제는 연구원의 설립 목적, 고유역량, 국정과제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별, 기획, 수행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 특정 과제에 인력 투입 비중이 높아져 여타 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
- 예산 대비 연구·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예산 대비 성과 제고 방안과 질적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지속 수행 과제의 사후관리가 필요함. 주택바우처 사업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관점에서

예산 조달 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피드백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 대응 정도

<장 점>

-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및 진단, 정책효과 분석, 정책방안에 등에 대한 정책리पोर्ट를 작성하고 유관기관에 보고하는 등 선제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 통일부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북한정보 통합 DB 구축, 부동산시장 대책, 수도권 규제 개선 등 정부 현안과제에 대해 의견 제시, TF 참여, 연구 수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함.
- 2.26 부동산 대책 효과 분석, U·City 발전전략 수립 등 정부의 현안과제에 대한 긴급·수시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단 점>

- 대부분의 현안 대응이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정부부처나 국가 기관과의 협력관계나 활동영역이 협소함.
- ODA 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다소 부족함.
- ‘전월세가 고공행진’ 등과 같은 현안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함.
- 정부의 현안과제에 대한 성과가 전문가 세미나·개선 방안 논의·참고자료로 활용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토교통부 중심의 정책 및 현안 대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확장을 통해 연구기관의 활동반경과 영역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음.
- ODA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일 언론자료 브리핑 등과 같은 방법을 도입해, 현안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건의함.
- 긴급·수시 현안과제는 중장기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 도출이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수행 결과가 법제화, 정책화 같은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국토교통부와 두 차례에 걸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다회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정도가 적절함.

- 한반도포럼, 미래국도포럼, U·City정책연구협의회 등 다양한 정책연구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함.

<단 점>

- 정책연구협의회를 하반기에만 두 차례 개최하여 정책연구협의를 위한 실질적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다소 의문시됨.
- ODA 관련 사업은 큰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해당 과제를 ‘직접’ 논의한 실질적 협력 회의가 없음.
-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의 사업자 단체 외에 전월세입자 등 주택 실수요자와의 네트워크 구성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규모가 큰 수탁과제를 수행할 시, 형식적인 수탁·위탁 협약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업무협약을 지속적이고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함.
- 국토교통부와 의 정책연구협의회를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운영할 것을 건의함.
- 정책연구네트워크의 구성 및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융·복합 연구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2-2.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성과

□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정책대안 마련과정에서 관련 국회,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였음.
- 특히 제도화가 가능하도록 법령의 검토와 그 미비점을 잘 분석하여 새로운 법령(예: 「새만금 특별법」, 「지역개발지원법」 등)을 제정하도록 하거나 개정하도록 하여 대안의 정책화 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국토연구원은 둘 이상의 과제가 상호 연관된 내용일 경우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연관과제 모두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였음. 예컨대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와 ‘도시재생사업단’의 협업,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와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또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이 도시재생사업에 앵커(닷: anchor)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각각의 연구결과를 정책화하기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정책 실적이나 사업(예: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판단함.

- 정책화 실적을 사업시행 일정별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연구결과의 정책실적을 명료하게 반영하고 있음. 예컨대, ‘녹색도시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의 경우 연구종료일이 2011.12.31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정책실효단계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음.
- 정책환경 변화(예, 임대차 시장에서의 전세에서 월세로의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시의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예: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의 5대 맞춤형 대안)하였고, 특히 수요자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실현 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특히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이러한 정책대안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데도 기여하였음.

〈단 점〉

-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연구에 반영되어야 하나 이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예컨대, 상가임대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의견수렴(‘상가권리금 보호방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연구’), 홍수 시 재난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시민들의 의견(‘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이 미반영되어(시의성이 아주 높으면서도 정책적으로 꼭 필요했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성은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또한 정책성과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하고 환류과정을 거쳐 성과 확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광역계획은 나름대로 협력이 잘 되고 있는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기본 계획은 도시 자체만의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최근 교통망이 좋아지고 도시화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콘너베이션(conurbation)화 되는 지역이 많아서(인천·부천, 의왕·군포·안양, 창원·마산 등)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계획 개념을 도입하여 지자체 상호간에 도시기본계획을 연계·반영할 필요가 있음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선도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우리나라에서의 통일과 관련한 주제는 아주 복잡적이면서도 선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것은 변화가능성이 워낙 높고 또한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과제(big & long-term project)인 경우가 많기 때문임.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역시 개발협력 핵심프로젝트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도 병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도성이 매우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는 조세형평성을 확보하여 정부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초연구임. 또한 부동산 보유세 정책입안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된 예측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은 과학적이고 선도성이 높은 우수한 방법론임. 연구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정책당국자인 국토교통부와 연구초기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연구결과도 학술논문 등을 통해 활발히 발표하여 연구성과의 전파에 힘씀.
-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는 연구 결과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었고 연구 종료 후, 재생사업 시범단지 선정,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정책추진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음. 또한 2015년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등에 노후도 진단지표를 반영한 것은 산업 재생사업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어 우수한 대안이라고 판단함.
- 진단지표는 해당 산단의 실제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고, 정량지표는 전국 모든 산단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정성지표는 산단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여 정책실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뿐만 아니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이후 산단에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것이 진단지표의 궁극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기업에도 매우 좋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함.

<단 점>

-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의 평가보고서에는 외교부나 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음. 탈북자단체나 기타 시민단체의 통일 후 인프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는 연구결과가 아직 제도화나 정책화에 다다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는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등을 대비하여 국가정책,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후속적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는 연구주제가 갖는 정책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도 중요한 연구임에 비해 정책실현이 될 수 있는 제도화 활동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연구에 관해 국회와 보다 긴밀한 교류를 통해 제도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1-2-3. 정책 집행사업 지원 성과

□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장 점〉

-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이미 9년의 사업연륜을 가지고 있어서 센터가 국가정책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큼. 그동안 사업의 복합성, 종합성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전공분야를 보유한 인력으로 조직이 구성되었고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모니터링 회의, 각종 정책협의회, 전문가 그룹, 현장 조사 등을 포함한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부에 대한 정책지원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 임대시장 안정 등 업무의 중요성에 부합하게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현장시장 분석, 지속적인 거시계량모형 개선, 적절한 분석 방법의 활용 등을 통해 시의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각종 정책지원 리포트 등도 활발히 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년 당초 계획한 사업내용을 달성하고 있고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사업집행 실적이 우수함. 정부와의 환류작업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8년의 연륜을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사업추진 조직이나 추진방식 등을 볼 때 센터 내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적절히 구성되어 조직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름.
- 사업추진체계나 사업관리도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의 도시 노후화 및 재생에 대한 요구와 수요를 감안하여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도시재생 사업실적이 뛰어난. 그간 센터에서 발간한 자료가 여러 기관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성과확산이 지속됨.
- 정부정책 지원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환류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특히 이용자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다양한 계층에 대해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단 점>

- 국정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책 수립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센터와의 정례적인 정책 협의는 다소 부족함.
-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에 대한 국민 접촉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센터가 정부에 대한 정책지원 기능을 활발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보다 긴밀히 연결할 수 있는 방안(예: 정례적 회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센터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여론 환기를 위해 설문조사, 지수발표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대국민 전달 노력이 필요함. 특히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사업당사자인 지자체에 대해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교육기회 제공,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방안이 요구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함. 연구과제별로는 기본연구, 수탁연구, 위탁연구, 공동연구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함. 상세유형별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본연구, 수탁연구, 위탁연구, 정보제공 순임.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기관의 정부 고객 만족도가 더 높음. 상세업무 각각의 전체평균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위탁연구와 정보제공의 경우 해당 업무 전체평균 대비 낮은 점수로 나타난 반면, 기본연구, 수탁연구, 공동연구의 경우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특히 공동연구에서 전체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KCSI - ST 구성모형별 분석결과, 전년 대비 ‘구비성’, ‘편리성’, ‘합리성’, ‘공정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점수가 낮음.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전문성’, ‘성실성’, ‘구비성’, ‘편리성’, ‘합리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체평균 대비 낮음. 해당 상세업무 각각의 전체평균 대비, 위탁연구와 정보제공을 제외한 3개 상세업무에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분석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의 정확한 이해’와 ‘회의 진행 시 참석자 의견 경청, 적극적인 의견 반영’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 결과물 체계적 작성’ 항목이 낮은 점수를 보임.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의 정확한 이해’와 ‘고객 문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친절한 응대' 항목이 높은 반면, '연구과제 체계적 수행'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 및 범위 명확히 제시'와 '담당자 접촉 용이'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연구 과제 제안·접수 관련 안내 적절' 등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공동연구의 경우, '해당분야 정책과 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객 문의 및 건의 사항 신속하게 처리'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의 경우, '고객이 신뢰 가능한 정보제공'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원하는 정보 획득 용이'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업무유형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 수행'에서는 연구 과제 수행 및 결과 작성 시 고객의 평가가 낮은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함. 과제 수행과 결과 작성의 세부 체계를 확인하고, 평가 제고를 위해 보완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정보제공'에서는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소폭 하락함. 상세업무별 결과 수탁연구, 위탁연구, 공동연구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한 반면, 기본연구의 경우 하락함. 상세유형별로는 공동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위탁연구, 수탁연구, 기본연구, 정보제공 순임.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기관의 산·학·연 고객 만족도가 더 높음. 상세업무 각각의 전체평균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수탁연구와 공동연구의 경우 해당 업무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로 나타난 반면, 기본연구, 위탁연구, 정보제공의 경우 해당업무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 KCSI·ST 구성모형별 분석결과, 전년 대비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점수가 낮았으며, '성실성'의 하락폭이 타 품질요소 대비 가장 큼. 전체평균 대비 분석결과, '전문성', '효율성', '편리성', '공정성', '공익성'의 경우 차원 및 품질요소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대응성'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해당 상세업무 각각의 전체평균 대비, 수탁연구와 공동연구를 제외한 3개 상세업무에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세부항목별 분석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회의 진행 시 참석자 의견 경청, 적극적인 의견 반영'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 결과물 활용도 높음' 과 '해당 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이 낮은 점수로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 정확하게 이해'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 요구사항 수집 절차 마련' 항목이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책임감 가짐'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기관의

의견·불만 사항 제시가 편리' 항목이 낮게 나타남. 공동연구의 경우 '고객의 협력 관계 조성에 도움' 등의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 보유'와 '고객 문의 건의 사항 신속하게 처리' 항목의 점수가 낮음. 정보제공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의 의견 제시 편리' 항목이 낮은 점수로 나타남.

- 업무유형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 수행'과 '정보제공'에서는 고객들이 의견 및 불만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는 채널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존의 고객 응대 시스템을 점검하여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기본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상·하반기 공모절차 성격을 차별화하여, 하반기 과제발굴, 선정절차는 정책고객의 연구수요에 집중 대응함으로써 연구과제 발굴의 효율성을 제고함.
- 정책연구협의회(108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과제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실무자 간의 정책연구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단 점>

- 연구과제 발굴단계에서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과제공모와 정부부처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편중됨. 정부와 내부로부터의 과제제안 이외에 다른 산·학·연 외부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과제발굴노력이 부족함.
- 선정된 수시연구과제는 정부요청이나 내부제안에 의한 과제들로서, 홈페이지, 웹설문을 통한 일반인 대상 외부의견수렴 등 외부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
- 수시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수시로 구성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외부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아울러 외부수요 조사결과를 구체적인 과제제안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외부수요조사와 과제제안제도를 확대하여 폭넓은 정책대상

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 과정에서 정부부처 외 산·학·연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수행·관리의 적정성

〈장 점〉

- 수시연구과제의 결과가 정부현안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분기별 연구본부 업무실적보고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어 수시연구과제 수행관리가 체계적임.
- 과제수행단계에서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수시연구과제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구조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시연구과제 참여연구자 1인당 과제수 1건으로 참여연구진 편중을 최소화 함.

〈단 점〉

- 과제명 변경 8건, 연구책임자 변경 1건 등 총 9건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책임자 변경의 원인은 보직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직변경으로 인한 책임자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최소화할 필요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책임자 변경은 물론 과제명 변경과 같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과제선정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함으로써 과제 수행 중에 연구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억제할 필요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관리 과정에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학·연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실적의 우수성

〈장 점〉

-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선정원칙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시너지효과가 적은 연구는 배제하는 등 협동연구 선정과정을 체계화함.
- 협동연구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후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 안전을 주제로 한 시의성 있는 협동연구 및 국토위성정보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 되는 협동연구 과제를 추진함.

<단 점>

- 2013년에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함.
- 협동연구 과제수 비율(51.5%)이 과제비 비율(32.6%)보다 높아서 협동연구가 소형과제 위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됨.
-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협동연구 과제의 경우 국토인프라연구본부뿐만 아니라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됨.
- 내실 있는 협동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시너지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동연구를 억제한다면, 그 판단의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협동연구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를 장려하되 협동연구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범국가적, 융·복합 과제 등 대형 과제를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내에서 기관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시너지 효과에 대해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1-3-3.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연구성과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그 규칙도 세분화 되어 있음.
- 지식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완에 노력을 기울인 것이 두드러짐(5개 시스템 보완 및 구축).
- 연구성과의 홍보와 확산을 위해 “지식정보실”을 신설하여 적절한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이 분야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연구원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성과확산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모니터링 결과를 매주 원내에 제공하여 원구성원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국가통계포털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음(언론매체들이

이 지수를 활용하여 관련 기사를 보도함).

- “국토사랑글짓기대회,” “국토탐방대회,” “지리올림피아드대회” 등을 통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 노력함.
-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확산수단을 활용하며 내실화하기 위해 홍보효과를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연구주제별로 정책이슈를 생산, 확산하기 위해 이슈페이퍼 발간실적이 48건에 달하고 발간 시기도 특정 분기에 편중되지 않았음.

<단 점>

- 지식자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는 했지만 시기적으로 연말에 집중하여 추진된 점은 연중 소기의 성과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 확산체계의 차별성이 미흡함.
- 국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회원 숫자가 4,474명(전년보다 107명 증가), 연간 방문자수는 336,447명에 그치고 있음.
- 해외 언론, 출판매체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노력이 일부 소수 국가에만 한정되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자산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조직과 인력의 보완이 필요함.
- 언론보도를 통한 국토관련 연구결과를 전파하는 동시에 비전문 정보수요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국토관련 행사들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행사를 개발하여 국민들의 국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신설된 지식정보실을 중심으로 연초에 분야별 연구결과의 확산에 관한 목표를 수립하고 연중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작동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를 해외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연구보고서의 영문초록과 다수의 영문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영문홈페이지에 업로드 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 3.0 추진 성과 정도

<장 점>

- “정책정보협의회,” “한국학술정보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타 기관들과의 정보공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단 점>

- 사전정보공표의 목록이 표준모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정부 3.0 추진을 위한 연구원 차원의 회의와 워크숍 개최 건수가 부족하고, 책임부서 지정

및 관련 직원교육의 실시 횟수도 제한적이며 실시 시기가 연말에 편중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내기에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타 기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확대하고 그 내용의 충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사전공표대상 공개주기, 시기 방법 등 공표방식의 적절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대학(학회) 및 민간기관 등과의 MOU 체결을 확대하여 정보공유 협업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해당사항 없음.

<단 점>

- 자체 발간물인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실적이 과중함.
- 논문게재실적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부실함.
- 연구원 1인당 학술지 논문게재 편수가 평균 0.73편에 그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토연구원은 국토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학술지의 중간이 필요함.
- 외국학자와의 학술적 교류와 이를 통한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영문 학술지의 발간이 필요함.
-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국토연구”에서 적용하는 논문심사 방식을 연구보고서의 평가심의에서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학술지 게재실적 향상을 위해서 정책전문지를 통한 연구 논문 게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1-3-4.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

□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와 성과

<장 점>

-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국제화 사업 추진 체제 구축
-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국제세미나 개최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짐.
- 파라과이 고이아니아 시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음. 또한 이 사업의 연구비가

미주개발은행으로부터 제공된 것은 주목할 만함.

〈단 점〉

- 지나치게 많은 기관들과 MOU를 맺어 이의 효율적인 관리가 우려됨.
- 국제협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일부 지니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국제 연구인력 교류 실적은 대상자가 국토연구원의 직원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음.
- 세계은행과의 수탁연구는 발주처가 수출입은행으로 외국수탁연구로 인정하기 어려움.
- 고위 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국토연구원의 적극적인 국제 협력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특히 교육대상이 고위공무원과 주한공관원으로 기관급 협력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제협력대상을 많이 늘리는 것 보다는 국제협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기관들과 해외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순협력보다는 기관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적인 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기관 연구역량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연구청사 이전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사시켜 기관의 현안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 기관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함.
- 기관의 현안 중 하나인 인건비 문제를 공개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서 만성적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함.
- 연구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를 중심으로 개도국 발전과 그 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노력함.

<단 점>

-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되나, 기관 현안문제가 내부문제에 다소 편중되어 있음.
- 현안문제를 도출하는 수단으로서 SWOT분석을 하였으나, SWOT분석의 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SWOT분석의 결과를 전략, 특히 ST전략과 WO전략을 추출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있어 현안문제의 도출 과정의 정당화 맥락이 다소 부족함.
- 기관장이 외부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미래지향적 사안에 대한 현안 문제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 사업 등 조직의 장기 비전을 명확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력 확보계획 또한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SWOT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의사결정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비록 이러한 기법이 최선을 찾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낼 수 있음.
- 국토에 대한 인프라 개발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국토연구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과제 개발수행이 필요하고, 특히 연구영역을 보다 심화하여 연구

여지(niche)를 확장하는 데 연구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예컨대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발전경험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인프라의 질을 고도화하는 데 연구자원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사업으로서 개도국 지원뿐만 아니라 선진국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지식 흡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사업 등 조직의 장기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인력 확보 계획을 보다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초기에는 국제회의의 개최와 같이 완제품형 교류를 하고, 중간단계로서는 연구자의 연수, 파견, 초청 등을 통해 글로벌 연구역량을 부분적으로 내실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구원의 글로벌 수준에서 최상위권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이 중장기적 차원에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안 문제를 제시할 때 내부지향적 문제와 외부지향적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기관장이 국가정책지원과 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관의 홍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원만하지 않은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특히 전 직원이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공유하게 한 점은 긍정적임.
- 열린소리함을 운영하고 건의함을 블랙박스 개념으로 운영하여 소통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을 소통하게끔 한 노력은 긍정적이며, 매주 생일을 맞이하는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기관장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제사업을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단 점>

- 노사 문제가 조직의 만성적인 문제임.
- 노사관계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관계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노조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연구활동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며, 다면평가 및 이의신청제도 운영 등 경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반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 예산 등 재정상황을 전직원에게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동의를 얻어낸 점과 연구윤리와 관련된 행동강령을 지침의 수준에서 규정 수준으로 전환 강화한 점은 바람직함.
- 내부감사규칙을 신설하고 감사실을 원장직속으로 하였음.
-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위탁 수의계약을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경비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표절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개정하였음.
- RefWorks를 활용한 참고문헌 관리 및 작성법을 교육함으로 연구보고서 작성의 능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표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단 점〉

- 내부감사규칙에서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함.
- 경영윤리 활동의 전년 대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함.
- 연구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점검이 다소 형식적임.
- 연구윤리 활동의 전년 대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의계약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단순히 금액기준으로 강화하는 경우 공개입찰이 가지고 있는 폐단인 질적 저하나 관리능률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적 차원에서 수의계약조건을 강화하는 것과 병행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계량적 지표를 통하여 경영윤리 수준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연구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심사를 보다 철저하게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연구결과물을 무작위적으로 소수를 표출하여 매우 정밀하게 심사를 하거나 집체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점검을 위하여 다단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단계별로 연구

윤리 상황을 지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1-2. 책임경영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경영목표들은 무난하게 수립되었으나 그 보다는 실천과제의 내용이 더 적절함. 특히 실천과제들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음.
- 전체적으로 실천과제가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고, 제시된 성과 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 미래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연구추진 및 관리로서 미래전략담당반과 미래연구과제 발견위원회 등 추진체제가 긍정적임.

<단 점>

- 5대 경영목표는 연구원의 특색이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연계 방안들이 다소 추상적임.
- 연구 성과의 확산 강화에서 주로 국내홍보에만 치중하고 있고 글로벌 홍보 확산을 위한 실천계획이 미흡함.
- “민생현장의 상시적인 소통채널 확보” 등 일부 실천과제의 경우 가시적 성과물은 별로 내지 못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보다 구체적이고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기관장 경영목표 및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설정이 요청됨.
- 글로벌 교류협력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해외연구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를 위하여 선진국 또는 OECD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 대상의 ODA사업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주제가 미래지향적 연구 외에 융·복합적이고 중장기 연구내용을 포함하는 과제가 보강될 필요가 있음.

□ 책임경영 이행 정도

<장 점>

- 경영목표, 정관승인 실적이 없어 연구회와의 협조 협력 실적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을

준수함.

- 경영목표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포함할 정도로 국제화 업무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3. 자율지표

□ 기관고유사업 수행과제(국가 주택·토지정책 지원 기능 강화)

<장 점>

- ‘국가 주택·토지정책 지원 기능 강화’는 본 연구기관의 고유한 기능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평가요소를 적절히 설정하였음.
- 기존의 인적 지원체계를 '14년에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
- 정부부처의 정책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주택 및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에 즉각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을 건의하였음.
- 언론매체·간행물·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지원내용을 홍보하고 정책 성과를 확산시키려 노력하였음.

<단 점>

- 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들과 직접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를 강화한 사업에 불과함.
- 기관 내에서의 지원체계의 분야별 구분과 분야 간 융·복합식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움.
- 국내·외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였으나, 그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활용실적이 다소 미흡함.
- 대국민홍보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효과의 정도가 확인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목적에 맞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보다 수행한 연구나 교육 등 기관의 역할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요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주택정책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 집중화가 필요함.

- 연구 및 활동내용,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성과의 일방적 유포를 넘어서 성과에 대한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피드백 할 필요가 있음.
- 활동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내실을 기하는 일과 성과의 확인·점검을 통해 개선을 시도 하는 일에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향후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전체의 국토개발 계획을 신중하게 연구해 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글로벌 KRIHS 역할 강화 및 협력 내실화)

<장 점>

- 우리나라 국토개발 경험을 세계에 전하고 본 연구원의 활동 범위를 국제적으로 넓혀 간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KRIHS 역할 강화 및 협력 내실화'는 평가요소로서 적절하게 선정되었음.
- 해당 과제의 추진을 위해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하고 국토개발 지식·정책경험 및 전수실적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노력하였음.
- 국가별로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증가하였음.

<단 점>

-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활동실적이 적고 특히 해외기관과 연구진이 함께 참여 하는 공동연구가 다소 미흡함.
- 우리나라 국토개발 역사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개도국에게 균형 있게 전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최선의 정책을 찾도록 교육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사전에 계획하여 해마다 일정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택 및 토지 정책 수립이나 국토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본 연구원의 활로를 열어 가는 일에 힘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국토개발 경험의 대 개도국 전수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서, 향후 교육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직의 의사결정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였음.
- 정책연구협의회 구성, 산학연 공동연구 실시,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2014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국토연구원의 과제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음. 일반국민 대상에 대해 각종 대회를 실시하여, 국토지식 공유 및 확산 노력을 수행 중임.
- 직급별 간담회, 전체회의, 본부업무협의회 등을 통해서 각종 내부민원을 수요 처리함.
- 신규채용 20명 증원, 재정 중 인건비 부분의 증액을 통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결원된 인력을 충원함.
- SWOT 분석을 통해서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과약에 노력을 기울임.
- 과제 수요조사를 통하여 외부고객의 연구수요를 반영함.
- 연구원의 신속한 지방이전을 위해 청사이전건축추진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청사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음.
- 2013년도 신규채용이 없었으나, 신규채용 및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20명의 신규(연구자 18명, 행정직 2명)의 인력을 충원하였음. 박사급 연구인력이 7명 순증가하여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음.

<단 점>

- 실적보고서에 제시한 환경변화를 도출하게 된 근거 및 사유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와 환경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결과와의 연결고리가 약함.
-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운영 실적,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실적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량적 성과지표의 제시가 미흡함.
- 내·외부 고객요구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활용하는 조직 내 담당부서와 절차, 활용방안에 대한 규정 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성과가 산출물(output) 위주로 나열되어 있음.

- 전략적 차원의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의 수립과 개선, 실질적 활용을 위한 규정 또는 매뉴얼 제정 등의 제도화가 미흡함.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바탕을 둔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이 직전 연도에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채용과정 단계별 객관성 향상을 위한 외부위원 참여의 범위와 수준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실적보고서에 환경변화를 도출하게 된 배경 및 근거와 사유를 SWAT 분석결과 등과 연관 지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운영실적과 효과를 궁극적 성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계량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기준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함.
- 내·외부 고객요구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규정과 매뉴얼을 포함한 제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고객요구를 조사·분석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함.
-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성과는 연간 경영성과지표별 목표달성 여부를 자체평가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전략적 차원의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의 수립과 개선, 실질적 활용을 위한 규정 또는 매뉴얼 제정 등의 제도화가 미흡함.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바탕을 둔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이 직전 연도에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채용과정 단계별 객관성 향상을 위한 외부위원 참여의 범위와 수준이 규정화 되어 있지 않음.
-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체계적인 우수인력 확보 및 이탈방지방안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장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전문분야별로 'KRIHS 브랜드'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음.
- 연구원의 역량모델링에 의해 도출된 기본역량, 리더역량, 직무행동역량 등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
- 신입직원들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기본역량 및 개발교육을 강화하였음.
- 스타연구원 발굴을 통해 연구원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였고, 스타연구원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외 홍보를 하였음.
- 중장기 인재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인재육성 목표를 수립함.
- 교육훈련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음.

- 연구원의 역량 모델링에 의해 기본, 리더, 직무 역량 등을 개발·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 특히 신규직원과 주니어, 시니어 직원들을 경력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
- 연구연수를 1년과 6개월로 구분하여 수요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활동보고서를 제출 및 발표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이에 대한 교육성과 관리차원에서 참여도 및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음.
- 연구직의 경우 직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음.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통해 유연근무제의 일부를 시행하고 있음. 스마트워크센터의 복무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등록 인식기 설치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등은 긍정적인임.

〈단 점〉

- 현재는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함.
- 교육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나 설문조사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여 피드백에 한계가 있음.
-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교육훈련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전략이 다소 미흡함.
- 유연근무제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음.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과 실제 프로그램과의 연계부분이 다소 미약함.
- 직무교육이외의 인문교양분야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
- 교육훈련비용이 높은 편에 비해서 교육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
-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안이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교육훈련 운영방향에서 직원 직무역량, 리더십함양 등 범주를 직급 및 직종별로 세분화 하고 체계화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집합교육을 통해 이를 평가하고 성적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과 실제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 있도록 실행 매뉴얼을 작성토록 건의함.
- 인문교양분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대한 만족도 제고 개선을 건의함.
- 교육훈련비 대비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건의함.
- 구성원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시행하는 등 구성원의 기관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구성원의 사기진작책이 미흡한 편이므로 다양한 사기진작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을 권고함.
-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제도를 시행하여 효율성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 전반적인 근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직과 비연구직간의 평가요소 및 기준을 달리하여 직군별 특성을 반영함.
- 정량과 정성요인의 반영비율을 7:3으로 동일하게 함. 연구직의 경우, 업무량과 질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70%는 완전하게 계량화하였으며, 30%는 정성적인 평가요소를 포함하였음. 비연구직의 경우 개인업무 평가지표를 40%, 부서실 관련 업무를 30%로 조정하여 개인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함.
- 정성과 정량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비연구직의 개인업무 평가를 위해 연초에 관련 지표와 점수를 설정하고, 부서장에 이를 본부장과 협의하여 확정함.
- 정성평가의 경우에도, 자의적인 추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등급제를 실시하여 정량화 노력을 기울임.
- 업적평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 TF를 구성하여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실제로 개선안을 2014년도 평정에 반영할 계획임.
- 학술지 게재에 대해서 근무평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에 반영하였음.
-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사담당자의 검토, 실장, 본부장과의 협의 및 노사협의를 거쳐 원규심의 위원회에서 확정함.
- 본부간담회, 직군별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업적보고서 평가 시, 외부평가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비연구직의 경우에도 부서장 1차, 본부장 2차 조정 등을 거치고, 전산시스템 상에 입력하여 투명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음.
- 평가결과를 연봉산정에 연동시키며,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능률성과급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승진 시 평가결과가 100% 반영되고 있고, 이외에도 포상 혹은 징계 등의 요소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단 점〉

-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와 내규가 없음.
- 평가과정 중에 비연구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승진과 관련하여, 평가결과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정량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와 내규를 마련 할 것을 권장함.
-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내규화 할 것을 건의함.
- 평가결과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할 것을 건의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노사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로스쿨 출신의 사내 변호사를 신규 채용함.
- 직급별 간담회 등 의사소통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최근 들어 쟁점별 노사간담회가 활성화되고 있음.

〈단 점〉

- 2013. 12. 임금교섭에 실패한 이후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복수노조체제 하에서의 갈등관리능력이 다소 미흡함.
- 임금을 포함하는 방만경영 관련 정부가이드라인에 대한 노조의 거부로 갈등 요인이 상존함.
- 신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노사협의회 또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음.
- 노무담당자의 교육 참여가 2회에 그치고 있고 내용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어 노무역량 강화의 기반 조성에 한계가 있음.
- 고충처리위원회의 미구성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고충처리 실적도 존재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상생의 이념에 충실하여 노조와 분쟁사안을 성실하게 교섭할 필요가 있음. 노사용화를 위해 복수노조의 설립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원의 성격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 정부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기타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노사갈등의 근원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충처리경로를 다양화하고 요청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고충제안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원장간담회, 부서별·직급별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노사 간 갈등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무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지식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단체협약 등 제반 규정의 개정을 통해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수하여야 함.

2-2-3.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장 점>

- 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을 개정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함.
- 정조사비 지급 기준을 축소하는 노력을 수행함.
-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포상기준을 축소하는 노력을 수행함.

<단 점>

-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중 취학전 자녀 유아보육비 월 15만원 지급, 배우자·자녀 중 가족 1인의 건강검진비 지원, 종양(암)에 대한 1회 검사비 지원, 업무외 사유로 사망 장애 시 위로금 지급규정 등의 실천을 완료하지 못한 한계를 가짐.

<개선 및 건의사항>

- 공상 및 사망 퇴직의 경우 가산금을 기준급여의 100%에서 70%로 지급하는 임의규정을 만들었는데 이의 개선이 요망됨.
-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중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하여 일부 개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장 점>

- 장기근속직원 및 정년퇴직직원 공로 포상 기준을 개정하여 지급액을 축소함.

<단 점>

-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중 병가기간을 축소, 장기근속자 안식월 폐지, 근무시간 내 문화체육의 날 행사 폐지 등은 개선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중 복무·인사와 관련하여 일부 개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목표달성 정도

〈장 점〉

- 일정수준의 기관 전체 및 1인당 개선목표를 달성함.

〈단 점〉

- 육아보육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함.
- 직원 외 가족건강검진비와 업무 무관 부상·질병 직원의료비에 대한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함.
- 병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월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함.
- 근무시간 내 문화체육행사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부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관 규정과의 상이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개선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육아보육비 지급, 직원 외 가족건강검진비 지급, 업무 무관 부상·질병 의료비 지급,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급여의 별도 보상비 지급, 병가 및 안식월 운영, 근무시간내 문화체육행사 실시 등 방만경영에 대한 개선계획이 준수되어야 함.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전략적 연구사업비 운용

〈장 점〉

- 기관의 설립목적, 국가정책에 부합된 중점연구과제 발굴·선정을 위해서 연구과제 선정 및 심의단계(본부별연구과제발굴회의, 정책실무협의회, 과제 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 등)를 제안서 계량평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단계별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
- 연구과제 발굴과정에서 1차 발굴된 과제를 정책실무협의회에서 평가하고, 이를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양 방향의 주제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든 연구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본부장들의 검토를 통해 보다 적실한 과제 선택과정을 채택하고 있음.
- 2015년도 연구과제는 통일 한반도, 과학적 정책수립 정책지원 등과 관련된 연구를 중장기적

과제로 선정 및 예산배분 하였으며, 중점 연구테마와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중점과제는 매년 발굴하기로 하고 예산을 배정하였음.

- 예산비중이 큰 연구과제는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중점연구과제에서 제외하고 있음.
- 중점연구과제에 대한 연차별 기대효과 및 예산배정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하고 있음.

<단 점>

- 2015년 이후의 중기예산은 외부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 모두 동일한 예산을 배정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의 규모 및 사업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권의사항>

- 중점연구과제의 예산배정 기준은 2015년도 예산을 근거로 차년도의 예산규모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추가적 예산소요가 전망되는 과제는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항목별 예산을 증액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나, 1차년도 예산은 적절히 산정되었음에도, 2차년도 및 3차 년도에 대한 예산은 1차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예산배정이 되어있어 2차 및 3차년도의 예산도 사업의 규모 변화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성격상 단계별과제(1, 2, 3)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들을 예산관련문제 때문에 연구주제별로 다시 전환하는 방침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중점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기관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단기과제 형태로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장 점>

- 정부부처 제안과제 선정 사업비는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80.8%, 기초연구과제 사업비는 24.9%, 수시연구사업비는 10.9% 등으로 모두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총 예산집행률이 88.8%로 최저 집행기준인 90%를 미달하고 있지만, 9월 출연금 예산 미배정액 2억 5천만원이 12월에 배정되어 실질적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률이 92.2%이므로 예산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졌음.
- 수시연구사업비 집행률이 73.7%로 다소 저조하나, 이는 일부 예산의 지연배정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평가기준(90%)을 상회하고 있음.

<단 점>

- 연구회 결산심사 결과, 수탁용역사업비 직접비 집행잔액을 정상운영비(21백만원)로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어 해당 평가요소의 평가에 반영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위탁 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 기능을 좀 더 강화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 수탁용역사업비의 직접비 집행잔액을 집행 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3-2. 보수체계의 적정성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총 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함.
- 2013년 대비 2014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인상률 기준(1.7%)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299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은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장 점>

- 연봉체계는 기본연봉과 기타수당 70.6%, 성과연봉 29.4%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근속 및 경력가산금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복리후생비는 지급하고 있지 않음.
-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중 비간부직의 지급률이 ±15%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음.
-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하였음.

<단 점>

- 기본연봉을 비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중 간부직의 지급률이 $\pm 15\%$ 로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성과연봉의 배분비율 중 간부직 및 비간부직 모두 최고·최저 직급의 비율이 10% 이하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협의를 통해 연봉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연봉 체계가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전환하고 인원배분비율과 차등지급률을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중 간부직의 최고·최저 차등폭을 1.4배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연봉의 인원배분비율을 최고·최저등급 10% 이상, 특정직급 50%이하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함.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국회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됨.
- 평가결과 및 개선계획에 대한 전 구성원과의 공유가 이루어짐.
- 부동산 및 건설시장 장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시모니터링체제를 운영함.
- 장애인 고용(5인 채용)을 통하여 의무고용률을 준수함.
- 국가유공자 고용률 6%를 달성함.
- 내부 직원 의견수렴,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개선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구축한 점은 기관의 긍정적인 노력으로 판단됨.
- 62개의 개선과제 가운데 8개를 제외한 54개의 개선과제를 완료함.

<단 점>

- 평가결과 및 개선계획에 대한 전 구성원과의 공유 과정의 시스템화가 부족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관련 개선이 완료되지 아니함.
- 이면노사합의 및 단체협약 관련 개선실적이 없음.
- 성과연봉 및 연봉체계와 기본연봉 지급의 적정성 관련 개선실적이 미약함.
- 3년 이상 근속직원 5년 휴직 허용제도 개선결과가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결과 및 개선계획에 대한 전 구성원과의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환류체계상 이를 시스템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성과연봉 및 연봉체계와 기본연급 지급의 적정성,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 시스템과 관련하여 개선실적이 요구됨.
- 단체협약과 관련된 지적사항의 개선이 요구됨.
- 현재의 평가결과 환류체계에 더하여 외부 고객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을 적절하게 추가하여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 비연구직 평가지표 계량화 정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장 점>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방문하여 장애인추천을 의뢰하였으며,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전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연계 고용 제도를 활용한 실적이 있음.

<단 점>

- 연간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2013년 1.4%에서 2014년 1.9%로 상승하였으나, 기간 전체에 걸쳐서 볼 때는 정부기준 3%에 미달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간 후반기에 들어 장애인 1명 고용함으로써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였으므로, 2015년도에는

의무고용률의 유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으며, 연초 장애인 채용계획서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장 점>

- 기간 중 청년인턴 채용계획 11명 대비 24명을 채용하여 채용목표를 달성하였음.
- 통합행정시스템에 의한 근태관리, 지도·감성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멘토링시스템 구축,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박람회 참여 교통비지원, 면접참여 시 출장처리 등을 하고 있으며, 기간 중 4명의 내부 전환채용 실적이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장 점>

- 국가유공자 고용률 6%로 정부기준을 충족하였으며, 2014년 1명 신규채용 실적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관련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 국가보훈처 수원지청과 향후 공개채용 진행 시 우수 인력 추천의뢰 및 채용일정을 공유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14년 국가유공자 1명을 신규 채용하였음.

<단 점>

- 국가유공자 우대에 관한 내부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가유공자 채용우대에 관한 내용을 내부규정에 도입함으로써 유공자 채용의지를 보다 확고히 하고, 현재의 고용비율을 연중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됨.

□ 휴가장려, 출산휴가, 육아휴직 운영의 적정성

<장 점>

- 휴가사용 촉진에 관한 내부규정(복무규정 제20조)을 두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부 권장문을 각 개인들에게 발송하는 등 사용촉진 노력을 기울여 휴가소진율 100%를 기록하였음.

-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에 관한 내부규정(복무규정 제25, 26조)에 따라 출산휴가 제도를 적극 권장 및 활용하고 있으며, 휴가 사용률 100%를 달성하였음.
- 육아휴직에 관한 내부규정(인사관리규정 제27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부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운영지침) 등을 통해 육아기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의 자발적 사용률은 100%임.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장 점>

- 인사관리규정, 위촉직 운용지침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그 내용도 적절하게 담고 있음.
- 복리후생 관련 제도시행에서는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없이 시행하고 있음.
- 기재부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연도별로 전환을 실행하고 있음.
- 위촉직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업무 직접 종사자의 최장고용기간(4년)을 삭제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함.

<단 점>

- 인력운영과 차별해소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거 규정의 신설·보완·제도수립 등 실질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이 다소 부족함.
- 급여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비연구직 석·박사급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격차해소 노력이 요청됨.
- 연구부서 연구업무의 위촉직을 제외하고는 2년 계약위주의 고용으로서 연장이 허용되지 않아 우수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간 차별이 존재함.
-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인력의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계획, 차별해소계획에 따른 주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 성과급여 지급을 연간 평균 업무과제를 전제로 한 월 기본급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우려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급여의 격차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기 비정규직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비정규직 인력의 운영 및 처우개선, 전환시스템을 마련하여 이를 실효성있게 이행해 나가기를 권고함.
- 비정규직의 고용의 안정성과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 기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